



“이런 적극행정이 좋습니다” 국민이 직접 뽑은 적극행정

-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Best 5 선정 -

- ▲ (1위) 범죄 연동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 ▲ (2위) 어업현장 목소리 반영,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 ▲ (3위)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 ▲ (4위)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 ▲ (5위) 위기가구 지원 필요 시,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 국무조정실(실장 임기근)은 올해 상반기 전 부처의 적극행정* 사례들을 검토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생활 불편을 해소한 적극행정 대표사례(10건)를 선정한 뒤 이에 대한 온라인 국민투표**를 실시(9.1~8)했다.

* 공무원이 현행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 입장에서 법령을 유연하게 해석·적용하거나, 기업·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창의적·혁신적 아이디어 추진 등

** '규제혁신블로그' 및 '규제혁신페이스북' 등 SNS 진행, 총 2,153명 참여

- 투표 결과 ^{1위}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2위}어업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3위}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4위}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5위}위기가구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및 지급이 국민이 직접 뽑고 칭찬한 사례로 최종 선정되었다.

[1위]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로부터 돈을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으나, 지인에게 직접 확인해 피해를 면했다. 해당 계정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중지된 전화번호로 생성됐지만, 메신저 회사가 이를 알 수 없어 계속 이용되고 있었다.

- (기존) 기존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는 범죄 이용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 중지만 규정되어 있을 뿐 해당 번호로 생성한 “메신저 계정”에 대해서는 이용 제한 근거가 없어서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 했더라도 기존의 메신저 계정을 이용한 추가 범죄의 피해 예방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개선)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생성된 메신저 계정의 차단을 위하여 해당 전화번호를 메신저 기업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추가적인 범죄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고 국민 재산을 탈 빠르게 보호할 수 있었다.

국민의 한마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금융-메신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응 범위를 확대한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2위]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해양경찰청)

◇ 지난 겨울 강릉시에서 어업을 하는 B씨는 가까운 바다에 있는 어장에서 조업하기 위하여 출항하려 했으나, 먼 바다까지 위치확인이 가능한 고가의 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출항할 수 없었다. 매년 겨울철 어려움이 반복되다 보니 올해에는 무리해서라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미리 구입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기존) 겨울철에 기상 특보가 발령되면 가까운 바다에서 조업하는 정치망* 어선에도 먼 바다를 나갈 때 필요한 고가의 위치발신 장치를 일률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민들의 어업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황이었다.

* 정치망 어업: 얕은 바다에서 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그물로 막고 그물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여 포획하는 어업

- (개선) 현장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출항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이를 통해 그간 연안 조업 어업인들에게 부담이 되었던 고가의 장비 대신 저렴한 일반 장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어업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어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였다.
-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2026. 4. 24.)

국민의 한마디

“어업인의 생업과 직결된 불편을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3위]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후손 C씨는 10년 넘게 햇빛이 잘 들지 않아 곰팡이 냄새가 나는 열악한 반지하에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다. C씨의 간절한 소망은 반지하를 탈출하여 쾌적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 것이었다

- (기존) 현행법상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중 선순위 유족*이 아닌 경우에는 주택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주택지원이 불가능하고, 이들에 대한 실제 주거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또한 별도로 되어있지 않은 상황으로 주거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 * 독립유공자에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자녀 중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 보상금, 생활조정수당, 의료지원 등을 지원중
- (개선) 독립유공자 후손 중 주거취약자 파악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기초생활급여 및 주거급여 수급자 데이터를 교차 검증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20호*를 확보함으로써 생계가 곤란한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다.
- *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재

국민의 한마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열악하게 사시는 게 늘 안타까웠는데, 국가가 직접 맞춤형으로 챙겨준 점이 보기 좋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최고의 정책 같아요.”

[4위]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국가데이터처)

◇ 장수군에서 산불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D씨는 한정된 예산으로 산불 감시 CCTV를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산불 위험 지역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설치 장소 선정 시 D씨의 현장 경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 (기존) 장수군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대형 산불의 위험성이 항상 존재하나, 고가의 산불 감시 장비의 경우 설치 대수가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자원 범위에서 효율적인 재난 예방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 (개선) 산불, 인구 외 지역의 강풍 패턴 등 다양한 변수를 도출하고 장수군 각 지역을 구획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산불 확산 위험 지역을 찾고, 산불 발생 확률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즉시 예산 투입이 필요한 최우선 지점과 위험 상위 50개소를 선정하여 제안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산불 감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고 재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국민의 한마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홍수 등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CCTV를 설치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5위] 위기가구 지원 필요 시,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보건복지부)

◇ 70대 독거노인 E씨는 치매 증상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보호자가 없는 상황으로, 보건·복지팀이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생계 및 의료급여 지원 등을 권유하였으나 대상자가 복지서비스를 거부하는 상황이었다.

- (기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에 대하여 필요 시 기초생활급여의 직권 신청이 가능하나, 수급권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하고 있어 심신미약자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수급권자 동의 없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 (개선) 적극행정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기초생활보장급여에 대해서도 당사자 동의 없는 직권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적극 해석하여 집행함으로써,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 등 스스로 급여 신청이 어려운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위기가구의 복지 골든 타임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국민의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찾아가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국무조정실 손동균 규제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무조정실	책임자	팀 장 방준희 (044-200-2432)
	규제총괄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이의종 (044-200-2429)

2026년 상반기

국민이 칭찬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온라인 국민투표 9.1.(화) ~ 9.8.(화) | 총 2,153명 참여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창의성·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

1

범죄 이용 전화번호의 메신저 계정까지 실시간 차단 지원

-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연계된 메신저 계정 신속 차단으로 추가 피해 예방



“ 😍 국민이 한마디

일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금융·메신저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대응 범위를 확대한 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2

어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겨울철 어선 출항 규제 개선

- 겨울철 조업 조건 완화로 어업인의 장비 비용 부담과 소득 걱정 완화



“ 😊 국민이 한마디

어업인의 생업과 직결된 불편을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끌어냈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

3

주거취약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맞춤형 보금자리 지원

- 독립유공자 후손 대상 임대주택 20호 확보로 주거 지원 및 예우 강화



“ 😟 국민이 한마디

독립운동가 후손분들이 열악하게 사시는 게 늘 안타까웠는데, 국가가 직접 맞춤형으로 챙겨준 점이 보기 좋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최고의 정책 같아요.

”

4

데이터 기반 장수군 산불 감시 CCTV 최적 입지 제안

- 산불 위험지역 과학적 분석으로 최우선 예산 투입 지점 및 위험 상위 50개소 선정



“ 😊 국민이 한마디

요즘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홍수 등이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CCTV를 설치하여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5

위기가구 지원 필요 시, 동의 없이도 생계 급여 직권 신청

- 기초생활보장급여 직권신청 확대로 위기가구 복지 골든타임 확보



“ 😊 국민이 한마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행정이 먼저 찾아가 지원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적극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